“지하철 무임수송 감당 힘들다” 국비 지원 촉구

광주·서울 등 6개 지자체 공동건의문 채택…“대승적 결단 필요”

광주를 비롯한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들 6개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최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와 도시철도 예산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무임승차 수요가 누적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주체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정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당시 정부가 노인·장애인·유공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받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지하철 노선 광역화 등으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누적 적자는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16조 5441억원, 부산 2조726억원, 대구 1조 6323억원, 인천 1조 6094억원, 대전 6774억원, 광주 6209억원 등이다.

여기에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수년간 이어진 요금 동결,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급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무임수송 손실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고 부담 등을 들어 반대하면서 보류됐다. 협의회는 매년 수조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원)를 활용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위드코로나 시대가 개막하면서 광주에서도 지하철 승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4일 지하철 1호선 금남로 4가역에서 승객들이 탑승하는 모습.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 광주시, 19일까지 공모

광주시는 “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을 발굴·시상하는 ‘2021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복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한 기업·단체이며, 공모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모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빙자료 등을 내려받아 작성해 자치행정과 이메일(jsk434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사회공헌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체계성과 효과성, 파트너십 등을 평가해 최대 8개의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단체에는 광주시장상을 수여하며 우수프로그램 사례집을 제작해 일선 기관에 배부한다.

김지환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를 밝힌 우수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사회공헌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가 전파되고 나눔과 배려의 광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무원 제안 우수정책 발표대회 전남도, 9건 연구과제 선정

전남도가 2021년 공무원 연구모임을 통해 발굴한 우수정책을 심사하기 위한 발표대회를 열어 ‘도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캠핑장 조성 방안 연구’ 등 9건을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1차 서면심사로 선발한 9개 우수 팀의 정책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평가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글로컬 이 파머스(Glocal E-Farmers)’ 팀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 연구’, 우수상은 ‘도랑치고 가재잡고’ 팀의 ‘농어촌 불용자원을 활용한 수산 신소득 개발’과 ‘내 손안에 무화과 스마트팜’ 팀의 ‘미래형 무화과 스마트팜 생산모델 제안’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글로컬 이 파머스’ 팀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 연구’는 전남 농·수산식품의 미국 내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주된 내용이다. 향후 독자적 플랫폼 운영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 활용 가능성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기회를 보여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랑치고 가재잡고’ 팀의 ‘농어촌 불용자원을 활용한 수산 신소득 개발 연구’는 배추 등 버려진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성게 축양방식 제안이다. 농·어촌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남도음식명가 129곳 새로 지정

전남도가 남도음식 고유의 맛과 멋을 자랑할 남도음식명가 129개소를 지정했다. 남도음식명가는 남도의 전통음식을 보존·계승하고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남도가 인증한 음식점이다.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1차 시·군 심사위원회와 2차 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2년마다 재평가를 하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자격을 유지하되, 상시 점검을 통해 기준 미달 음식점은 명가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선정된 음식점에는 지정서 및 표지판을 제작해 부착하고 홍보물품 배부, 누리집(www.namdo.or.kr) 및 SNS 홍보와 위생업소 지원사업 우선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영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남도음식명가 음식점이 전남의 대표 맛집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외지인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육성·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영주택 골프장 부지 제공은 기부 빙자한 거래”

시민단체, 차기 나주시장 후보자 설문 15명 중 10명 답해
10명 중 6명 “전남도·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제구실 못했다”

나주지역 시민단체 설문조사에 참여한 나주시장 예비후보자(입지자) 10명 전원은 부영주택 측이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제공한 것을 두고 “기부가 아니다. (나주시·전남도와의) 거래행위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부영주택 측이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한 땅의 평가액은 약 800억원인데, 용도변경이 이뤄져 계획대로 아파트를 지으면 (5000억원에서) 1조원 안팎의 이익이 예상된다. 공공기여가 충분하다 보느냐”는 질문에 “(공동체를 위해) 추가로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는 “부영CC 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차기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 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SNS, 이메일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설문조사에 응한 10명은 김덕수, 김병주, 김도연, 박원우, 백다례, 송일준, 이민준, 이웅범, 지차남, 최용선씨, 미응답자는 강인규 현 시장을 비롯해 강백수, 김선용, 윤병태, 이재창씨 등 5명이라고 덧붙였다.

응답자 10명 전원은 부영주택이 제공한 한전공대 부지가 ‘순수기부’가 아닌 ‘거래’라는 점에 ‘적극 동의’했다. ‘자역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5단계 용도 상승이 과도한 특혜’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전원이 ‘적극 동의’했다. 혁신도시에 특정 아파트(부영아파트) 비중이 과다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7명이 ‘적극 동의’했다.

토지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나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동안 제구실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단체는 이 질문에 “전남도와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3년간 부결한 사례는 전남 0건, 나주시 0.2%”라는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부영CC 특혜 사건을 풀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찾아보자”고 답했다. 시장 예비후보자 2명은 “용도지역 변경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